

민주,尹 '쉬운 수능' 논란에 "최악의 교육참사"

"대통령이 입시 출제까지 간섭하면 北 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쉬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란과 관련해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시 출제까지 간섭하면 북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다. 만 5살 초등학생도 입학 논쟁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 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능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으로 담당 부처의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인 한국교육평가기원장이 사임하는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고 꼬집었다.

이어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 난이도를 이유로 평가원장이 물러나는 것부터가 처음 있는 일이고, 수능 5달을 앞두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감사가 민생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빠르게 이 혼란을 수습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 "올 수능, 방향·기조 유지해야" 김성주 의원 "입시제도는 국가교육위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며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 필요하다. 수능의 길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 보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를 늘려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

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추진하겠다"며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장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입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

박한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며 "대통령이 모든 분야를 잘 알고, 판단의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민주주의이다. 대통령이 입시 출제까지 간섭하면 북한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면서 더 크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며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시제도 등은 국가교육위에 맡기는 게 맞다"며 "1등만 기회 갖는 불평등사회가 있는 한 모두가 1등 향해 달려간다. 교육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공정임시가 아니라 평등사회다. 경쟁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민 의혹 검증 안하면서 어떻게 안전하다고 단언하나"

민주 윤준병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안 질의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이 20일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안질의'에서 "현재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검토·검증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전하다고 단언하나"며 과학적 검증 없이 안전하다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는 계속 '과학적 검증' 타령만 하는데, 과학적 검증이란 우리 정부가 의심되는 대상을 원할 때 채취해서 검증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어야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일본이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 검증은 불완전한 제한적 검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감측용 박시를 통해 검증 내용을 받고 공유하고 있다고 하나 김 박시는 IAEA와의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IAEA 후쿠시마 오염수 TF 밖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김 박시가 자료를 생산하거나 IAEA로부터 받은 자료도 정부에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를 공유받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는 짓이 무엇인가"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한편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참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석현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출장소감에 대해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의 핵종별 농도 및 총량 등에 대한 검토 자료가 공유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시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것"이란 말은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가 향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조종관 장관은 지난 2월 발표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모델 개발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조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민주, 혁신기구 출범... 첫번째 의제는 '돈봉투 사건'



'김은경호'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 20일 본격 출범했다. 혁신기구는 첫번째 의제로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오고갔다는 의혹인 돈봉투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혁신기구 1차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0년 이후 국회의원이거나 당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봉투 사건과 함께반에 연결시켜서 제도적 혁신안을 만들어보는 것을 첫번째 의제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혁신위를 나오게끔 했던 가장 기초사건이 돈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돈봉투 사건은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은 개인의 이탈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걸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별도로 봐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따라잡기 쉽지 않다"며 "이전 더 논의한 다음에 다루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돈봉투 문제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혁신 동력 저해 시도·연행에 일체의 관용 없다" 돈봉투·코인에 국민 신뢰 잃어... 윤리정당 거듭 내년 총선 공천에 현역 의원 기득권 체계 혁파 반대 세력 지지하는 국민 안는 포용 정당으로"

이어 "수사보다 우리가 더 잘할 가능성이 있는지 회의감이 있었으면서도 진상조사를 기초적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고 문제 발생 원인을 해볼 것"이라며 "전당대회 진행과정에서 있던 일들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진상조사 범위 내에 넣어 문제 발생의 원인부터 찾은 뒤 그에 따라 혁신안을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조직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돈봉투 사건의 자료를 보니 심각한 사건인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의원들과 그분들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 정치적이고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에는 사적으로 학교 수업하는 곳으로 운전하다가 전화와 받고 사적인 얘기를 한 것이었고 지금은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는 드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날 "이 시간 이후로 당 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연행에 대해 일체의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각종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데도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변화와 반성이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가족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혁신위원회는 윤리개혁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민주당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

또 "기득권을 타파한 민주당, 개혁정당의 모습을 찾도록 하겠다"며 "정당이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혐오를 일으킨다"며 "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혁신위는 윤리 회복을 넘어 정치 회복까지 제안하고자 한다"며 "반대편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국민까지 감싸려는 포용과 확장의 정당, 당원을 존중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정치권에 빛이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니다"며 "계파의 이익과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향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치의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 206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물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혜식 민주당 국회의원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등의 혁신위원을 발표했다. /뉴시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 추가

민주 윤준병 의원,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종래 연면적 기준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난이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다.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

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록 면적은 넓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설치돼 있는 대형 축산시설은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 등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최인호·민병덕·안효영·최준영·김철민·윤재갑·강득구·안규백·김영배·양정숙·민형배·김성환·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강태창 도의원, 전북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토론회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군산)은 20일 6·15 공동선언 발표 23주년을 맞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신기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원광대학교 이재봉 명예교수가 '평화 위기와 시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필요성', 강태창 도의원이 '전북지역 통일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사단법인 우리민족이재봉 사무처장이 '광주 통일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정 토론회는 이 사빈 전북하나센터장과 김성희 전북거래하나 사무총장이 나섰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북도가 2016년 제정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통일교육 기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길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민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와 체험 등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전국 13곳에서 운영되는 통일관이 전북에는 없다며 지역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강태창 의원은 "남북 관계 경색, 북핵 문제 악화 등 통일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황영석 도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호스피스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규정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전라북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내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본 조례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죽음의 과정에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호스피스 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정의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행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